

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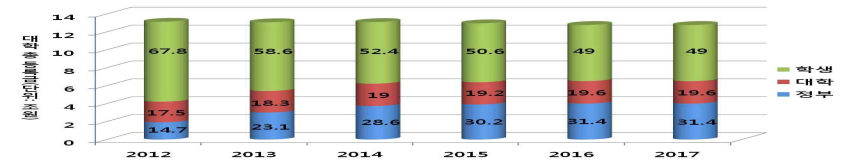
2018. 2.

교 육 부
(대학재정장학과)

I. 추진배경

- 체감 가능한 등록금 경감 정책에 대한 학생·학부모 요구 지속
 - 정부·대학이 재정 분담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, 실질적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아직 부족

【 '12 ~ '17 주체별 등록금 부담 비율 】



- 다자녀,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요구 지속
-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의 체계성 및 안정성 미흡
 - 잦은 소득구간 변동*,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인 소득구간 기준이 모호** 해 정책 불만요인으로 작용
 - * '16.1→2학기 : 44.3%(502,690명) 변동, '17.1→2학기 : 34.2%(375,305명) 변동
 - ** (예) 2구간 경계값 : ('16.1) 268만원 → ('16.2) 318만원 → ('17) 312만원
- 국가 및 대학자체 장학금의 지원기준 연계 필요
 - 국가장학금 II유형* 및 대학 자체장학금은 대학 자율 기준으로 지급되어, 소득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
 - * '16년 II 유형 소득별 지급액 : 9~10구간(약 128억 원, 2.5%)
 -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에 따른 대학 부담 가중으로 지원기준 개선 및 등록금(입학금) 인하 유도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 필요
- (국정과제 49-4-1)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
 -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를 통해 반값등록금 추진 등 대학생에게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

- ❖ 누구나 고등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소득체제 개편,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한 공정한 국가장학제도 구축
- ❖ 국가장학금(II유형) 개선으로 정부·대학간 상호 보완적 장학시스템 구축

II. 현황 및 문제점

【 현황 및 그간의 노력 】

- 장학금 6.5조원 지원('17년)으로 115만명 학생이 학업에 집중
 - 정부와 대학(등록금 인하/장학금 확충)의 공동 노력으로 6.5조원 지원, 年 115만명('16년)이 국가장학금(1인 年311만원 지원) 수혜
 - 학업시간 향상 및 근로시간 감소 등 학업집중 환경 조성
 - * '11년 대비 근로시간 20시간 감소(83→63), 학업시간 1.4시간 증가(162→176), 일반휴학률 29%p 하락(129→100), 성적미달 미수혜자 학업성적 26점 향상(77.9→80.5) 【15년 장학재단 조사결과】

□ 대학 등록금 안정화에 기여

- '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, 대학이 등록금 인하·동결 등의 자체 노력을 통해 등록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보다 낮게 하향 안정화
 - ※ 등록금 수준(4년제, 대학정보공시, 결산기준)
 - 사 립: ('00) 451만원 → ('11) 769만원 → ('16) 736만원('11년 대비 4.3% 감소)
 - 국공립: ('00) 219만원 → ('11) 435만원 → ('16) 412만원('11년 대비 5.3% 감소)

□ 저소득층(기초~2구간) 등록금 부담 경감률 90% 이상 달성

-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단가 인상*, 학점기준 완화** 등 제도 개선
 - * ('15년) 480만원 → ('17년) 520만원 / ** C학점 경고제 : ('15년) 1회 → ('17년) 2회

【 '16년 소득구간별 등록금 부담 경감률 】

(단위 : %)

| 구분 | | 기초 차상위 | 1 구간 | 2 구간 | 3 구간 | 4 구간 | 5 구간 | 6 구간 | 7 구간 | 8 구간 | 9 구간 | 10 구간 | 평균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부담 경감률* | | 104.5 | 97.6 | 95.0 | 80.4 | 69.7 | 55.4 | 46.3 | 38.3 | 37.2 | 21.5 | 23.8 | 66.4 |
| 설 립 별 | 국공립 | 125.8 | 113.1 | 108.9 | 104.9 | 101.6 | 91.9 | 79.3 | 67.9 | 65.2 | 38.6 | 44.5 | 86.2 |
| | 사립 | 102.4 | 95.9 | 93.3 | 77.5 | 65.8 | 50.7 | 42.1 | 34.3 | 33.3 | 19.1 | 20.5 | 63.9 |

* 부담경감률 : (국가장학금 + 국가재원장학금 + 대학교내·외장학금) / 등록금총액

【 문제점 】

□ 한정된 지원범위와 중산층 수혜자의 낮은 정책 체감도

-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절반 이상 수혜자가 일부*에 불과하여, 학비 경감이 필요한 수혜자(중산층)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
 - * 전체 대학생 224만명 대비 약 52만 명(23.2%) ('17.1학기 기준)
- '17년 기준, 국공립 5구간, 사립 4구간 이상 재학생*의 낮은 정책 체감도가 국가장학금 제도 주요 불만 요인으로 작용
 - * 사립 4년제 절반(368만원)미만 지원 : 4(286만원), 5(168만원), 6(120만원), 7,8(67.5만원)구간

□ 소득구간에 대한 신뢰도 저하

- 신청인원 소득수준에 따른 상대적 경계값 설정 및 매학기 조정 등 으로 소득구간과 산정방식에 대한 신뢰도 저하
- '17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한 경계값을 설정하고 공표하였으나, 타 복지사업 및 교육복지사업 연계 필요성* 여전
 - * 차상위 및 교육급여(기준중위소득 50%) → 국가장학금 경계값 기준중위소득 50, 100% 부재

□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에 따른 대학 부담 가중

- 그동안 대학의 추가적인 등록금 인하·장학금 확충 정도를 누적 반영한 결과, 대학의 추가 자체노력(등록금 동결·장학금 확충) 한계 도달
- II 유형 실적 누적에 따른 대학 간 지원액 편차를 완화하고, 대학의 실질 장학금 수요 규모를 고려한 배정방식 개선

□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

- 다자녀* 및 저소득층(기초·차상위), 장애대학생, 지역인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요구 지속

* 【대통령 말씀사항】 “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”(저출산고령사회위, '17.12.26.)

-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건전한 계층이동 촉진 역할을 재건

Ⅲ. 추진 방향 및 과제

| | |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비전 |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복지 국가책임성 강화 | |
| 목표 |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- 2019년 중산층(기준중위소득 150%)까지 반값등록금 지원 - | |
| 기본 방향 | | |
| 10대 중점 개편 과제 | (과제1) 초·중등·대학 교육복지 체제 구축 -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구간 재구조화 초·중·대학 지원기준 연계 | 교육복지의 체계성과 일관성 확보 |
| | (과제2)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- II 유형도 소득구간 연계 | 소득과 연계되는 장학지원체제 구축 |
| | (과제3)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점진적 확대 - (17년 기준중위소득 90% 이하 3구간 → (18년 120% 이하 6구간) | 중산층까지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 |
| | (과제4) 국가장학금 표유형 지원방식 개선 - 지원신청 개편, 입학금 실비용분 지원 | 지원액 형평성 도모 입학금 인하 유도 |
| | (과제5) 지역인재장학금 개편 - 저소득층 지역인재 지원 강화, 의·약학 계열 우선지원 | 지역인재 교육격차 해소 |
| | (과제6)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강화 - 저소득층 및 장애대학생 성적기준 완화 | 교육희망사다리 복원 |
| | (과제7)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(셋째이상→모든자녀) | 미래 인재 확보 및 저출산 완화 |
| | (과제8) 초과학기제 제한 폐지(학제·횟수 → 총8회) 및 소득 조사 횟수 단축(2회 → 1회) | 장학금 수혜자 만족도 제고 |
| | (과제9)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(70만원→100만원) | 소득 산정기준 현실화 |
| | (과제10) 오선발 방지 대책 강화(TOOL개발) | 장학금 지원 배분 공정성 강화 |

Ⅳ. 주요 추진과제

1 초·중등·대학 교육복지 체제 구축

□ 필요성

- 국가장학금 정책 지원 목표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, 소득구간 체계의 객관성, 안정성 확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과 연계 필요

□ 주요내용

①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구간 재구조화(국가장학금 I 유형)

- 기준중위소득의 100% 기준을 소득 5구간로 설정,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과 일치시켜 정책 수용성 및 지원기준 이해도 제고

[2018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(안)]

| < 현 행 > | | | < 개 편 >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구분 |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| 비고 | 구분 |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| 비고 |
| 기초·차상위 | 자격기준 | | 기초·차상위 | 자격기준 | 교육급여 수급대상 |
| 1구간 | 30% | | 1구간 | 0~30% | |
| 2구간 | 70% | | 2구간 | 31~50% | |
| 3구간 | 90% | | 3구간 | 51~70% | |
| 4구간 | 110% | | 4구간 | 71~90% | |
| 5구간 | 130% | | 5구간 | 91~100% | |
| 6구간 | 155% | | 6구간 | 101~120% | |
| 7구간 | 180% | | 7구간 | 121~150% | |
| 8구간 | 220% | | 8구간 | 151~200% | |
| 9구간 | 290% | | 9구간 | 201~300% | |
| 10구간 | - | | 10구간 | 301% ↑ | |

※ OECD 계층별 소득기준(빈곤층(중위소득 50%미만), 중산층(50~150%)) 참고

* 【중위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 개념】

- (중위소득)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 소득, 통계청 발표
- (기준 중위소득)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급여수준과 최근 중위소득(3년)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
- ※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(10부처·총66개 사업, 보건복지부 발표, '17.7.3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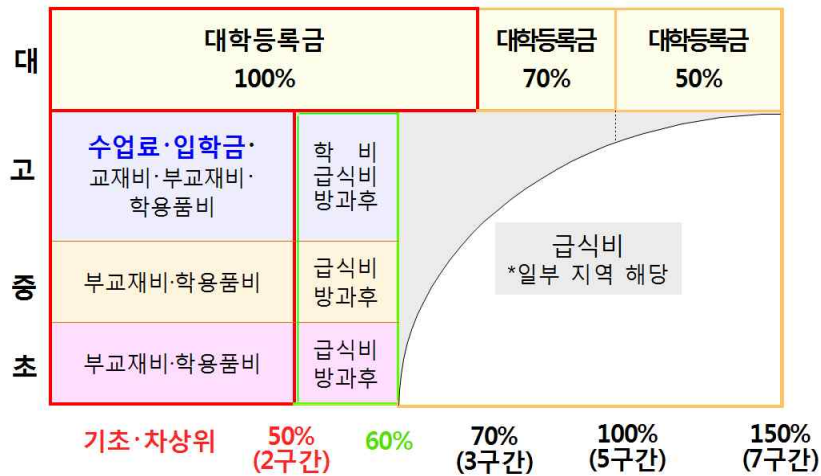
-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

② 초·중·고·대학 교육복지 체계 구축

- 초·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을 일치시켜 초·중·고·대학 교육복지 체계 구축

| | 현 행 | 변 경 |
|-------|--|---|
| 초·중·고 | 기준 중위소득 50%에 따라 지원 | 좌 등 |
| 대 학 | 신청자 소득분포에 따라 소득구간 경계값 결정, 소득구간 예측 어려움 | 기준 중위소득값에 따라 소득구간 경계값 결정, 소득구간 예측 가능 |

< '18년 초·중·고·대학 교육복지 연계 모형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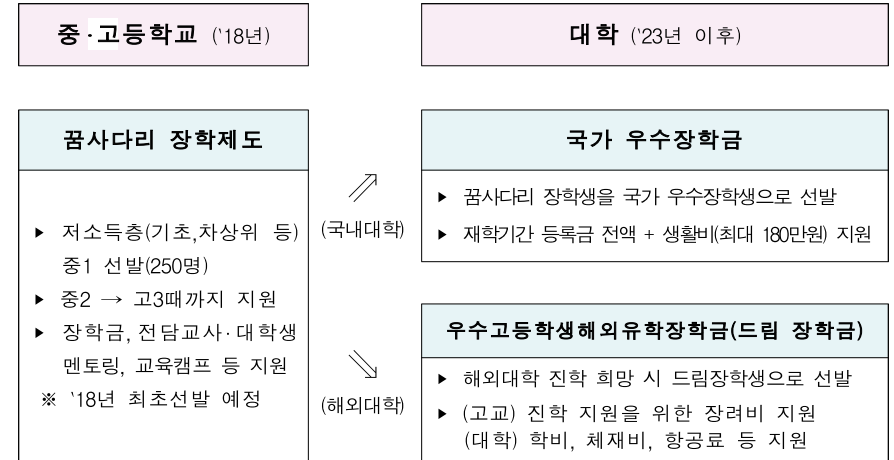


③ 꿈사다리 장학생, 국가 우수 인재로 지속 관리·지원

- 잠재력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중·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
- (중·고교 단계) 꿈사다리 장학제도*를 통해 장학금, 멘토링 등 지원
 - * 저소득층(기초, 한부모, 차상위) 중1 학생을 선발하여, 중2부터 고3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(멘토링, 교육캠프 등) 지원('17.12월 발표)

- (대학 단계) 국가 우수장학생*으로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·생활비 지원
 - *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계열별(이공계, 인문100년, 예술체육비전 장학금) 지원

[중·고등학교 → 대학 장학제도 지원 트랙(안)]



□ 기대효과

- 기준중위소득 도입으로 소득구간 산정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
- 초·중등 교육급여 지급 기준과 연계하여 교육복지의 체계성, 일관성 확보로 수혜 예측가능성 제고 * 교육급여 지급기준 :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%
- 소득구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해 국가 전체 복지시스템 향상에 기여
-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성장 경로 제시

2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

□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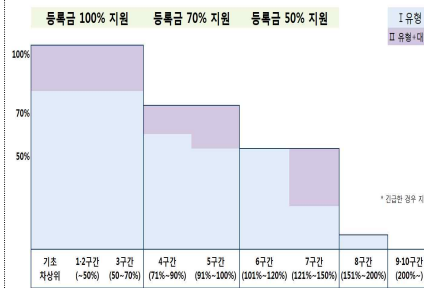
- 국가장학금 II 유형(대학연계지원형)은 개별 대학마다 지급 기준이 다르고, 일부는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되어 체계적인 지원 기준 마련 필요

□ 주요내용

- 소득과 연계한 체계적인 장학금 지원책 마련을 위해 국가장학금 I+II 유형 연계 기준(가이드라인)을 제시
-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소득구간별 지원 금액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II 유형 및 대학의 교내·외 장학금 지원 유도
 - ※ 대학의 가계곤란 장학금 확대 추세로 높은 정책 효과성 기대
 - cf) 성적장학금 폐지 대학 : 고려대('16.1학기), 서강대('18.1학기)

['18] 국가장학금 (I+II 유형)+대학 교내·외 장학금연계기준(안)

| 구분 | 지원 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초차상위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(3구간 이하) | 등록금 대비 100% 지원 |
|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(5구간 이하) | 등록금 대비 70% 지원 |
|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(7구간 이하) | 등록금 대비 50% 지원 |
|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 (8구간 이하) | 대학 재정 현실에 맞게 지원 |
| 기준중위소득 200% 이상 (9구간 이상) | 지원 제외 ※ 단, 긴급경제사정곤란자 등 예외인정 |



□ 기대효과

- 중산층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까지 소득 연계 강화, 대학별 재배분 기능 강화로 학생의 장학금 수혜에 대한 실질적 기회보장 및 형평성 제고

3 2019년까지 반값등록금 지원대상 확대

□ 필요성

-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 받는 인원은 일부*(23.2%)에 불과, 중산층(기준 중위소득 150% ↓) 가정 대학생의 수혜 확대 필요
 - * 대학 평균등록금 기준 절반이상 수혜자(I 유형)는 약 52만명('17.1학기 기준, 사립 기초~3구간·국공립 4구간) 정도로 총 재학생 224만명 대비 23.2% 정도

□ 주요내용

①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 확대(I 유형 단가 인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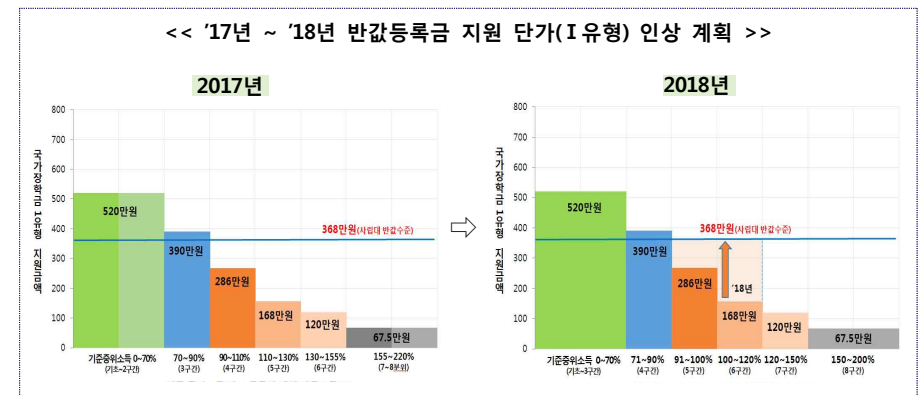
- ('17년) 기준중위소득 90%이하('17, 3구간)→ ('18년) 120%이하('18, 6구간)
 - * '18년 499억 증액, 반값등록금 수혜학생 약 8.7만명('17년 52 → '18년 60.7만명) 증가 예정

< 소득분위(구간)별 I 유형 연간 지원금액 변경(안)>

(단위 : 만원)

| 구분 | 기초 차상위 | 1구간 | 2구간 | 3구간 | 4구간 | 5구간 | 6구간 | 7구간 | 8구간 |
|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
| 2017년 | 520 | 520 | 520 | 390 | 286 | 168 | 120 | 67.5 | 67.5 |
| 2018년 | 520 | 520 | 520 | 520 | 390 | 368 | 368 | 120 | 67.5 |

['18년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(안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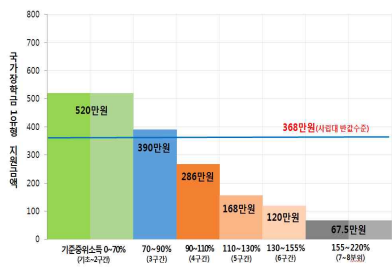


② 중산층 반값등록금 단계적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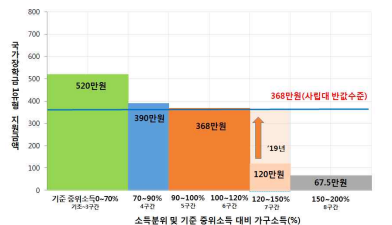
- '19년 중산층 계층(중위소득 150% 이하, 7구간) 이하 가정의 대학생 약 69만명*에 대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
 - * 반값등록금 수혜인원 추계 : ('17년) 약 52만명 → ('19년) 약 69만명(17만명 ↑)
 - ※ '17년 1학기 지원인원 기준 및 학령인구 감소분 반영
-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('17년 대비)하여, 수혜자 확대*, 소득구간별 단가 인상 등 정책 체감도 제고 추진
 - * ('19) 7구간 중산층까지 반값 지원 ⇒ ('20~) 8구간 이하 단가 현실화

[참고 : '18년~'20년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(안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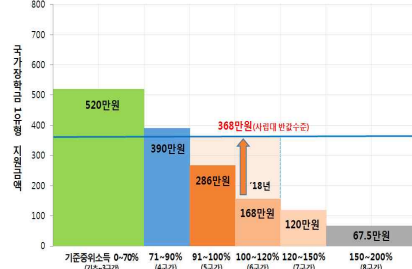
<2017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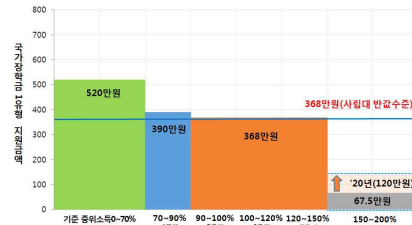
<2019년>



<2018년>



<2020년>



※ 국정운영 5개년 계획('17.7월) : (재정투자)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(+ 1.0조원)

□ 기대효과

-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구간 확대로 대학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 추진

4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방식 개편

□ 필요성

- 그간의 장학금 확충 누적 실적으로 발생한 대학별 II 유형 지원 편차 심화*로 지원 금액이 일부 대학에 집중 지원**되는 결과 고착
 - * '17년 대학별 지원액 : (최고) 84억 원 - (최저) 15만원('17년 배분 기준)
 - ** 상위 7% 대학(20개교)에 전체 예산의 26%(1,074억원) 지원('17년)
- 등록금(입학금 포함) 인하노력 유도 및 소득연계에 따른 지원 강화 지표 필요

□ 주요내용

< 저소득층 가중치 부여 등 지원 방식 개편 >

- (수혜격차 완화) 수혜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교별 1인당 지원액 격차를 완화*하고 저소득층 학생 가중치 부여로 2유형 소득연계 지원
 - * 대학 배분예산 표준편차 비교 : (현행) 1,469천원 (개선안) 998천원
- (지원산식 개편) 그간은 추가적인 등록금 인하·장학금 확충분만을 반영하였으나, 대학의 종합적인 장학금 확충 노력*을 고려한 지원 방식 개선
 - * 과거 3개년 등록금 인하·장학금 확충률, 장학금 지급률(총 장학금/ 총 등록금) 반영

< 입학금 감축 유도 및 인센티브 지원 >

- (입학금 감축유도) 입학금 감축 대학에 대해 학생이 부담하는 입학금 실비용분을 장학금으로 지원 추진
 - ※ 향후 입학금 인하분도 등록금 인하율에 포함하여 반영 예정

□ 기대효과

- 저소득층 학생 수 가중치 부여를 통해 II 유형 소득 연계 지원 실현
- 대학별 예산 편차 완화로 대학에 관계없이 학생 지원액의 형평성 도모
- 입학금 인하분 지원으로 입학금 감축 유도 및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

□ 필요성

- 우수 지역인재의 지역대학 유치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취지를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전체적 개편 필요
- 저소득층 지역인재(의약학계열 포함)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

□ 주요내용

< 지역인재장학금의 저소득층 지원 강화 >

- 선발기준으로 **소득요건(기초~8구간)을 도입**하여 저·중위 소득구간에 비해 보다 많은 장학금 기회 부여
- **우수 지역인재 지역대학 유치 및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초~5구간(중위소득 100%)는 재학기간 동안 전액 지원**
 - ※ (현행) 소득구간 관계없이 1년 전액 → (개편) 기초~5구간은 재학기간 전액, 6~8구간은 1년 전액

< 저소득층·의·약학계열 진학자 지원 강화 >

- 서민의 의료인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**저소득층(기초·차상위) 의·약학계열 학생에게 6년간 등록금 전액 우선 지원**
 - ※ <국정과제> 51-1-3 저소득층·지방고졸입생 지방대 의학계열 입학기회 확대

< 전문대 성적기준 완화 >

- 현행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**전문대 성적기준을 완화**하여 **기술우수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**
 - * (현행) 수능(2개영역)·내신 3등급 이내 → (개편) 수능(2개영역)·내신 **4등급 이내**

< 지방인재장학금 명칭 변경 >

- 서열적·부차적 의미가 내포된 '**지방**' 대신 '**지역인재장학금**'으로 변경
- 기존 '**자율육성분야***' 대신,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**특화된 인재 선발** 의미가 내포된 '**특성화분야**'로 변경
 - * 자율육성분야 : 대학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인재를 자체기준으로 선발

□ 기대효과

- 소득연계 및 집중지원으로 저소득층 지역 우수인재의 교육격차 해소

□ 필요성

- 기초·차상위계층 대학생 및 **장애대학생들의 현실적·경제적 어려움**을 고려한 학업부담 및 고등교육 비용 부담 경감 필요
- **장애대학생은 주요 배려 계층이나, 일반 대학생과 동일한 기준(II 유형)으로 지원하고 있어 개선 필요**

□ 주요내용

- 기초·차상위대학생의 성적을 **80점(B) ⇒ 70점(C)으로 성적기준 완화**
 - ※ 소득 4~8구간은 기존 유지(B), 소득 1~3구간은 B학점 +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
- **장애대학생 성적 심사 기준 폐지**(C학점 이상 ⇒ 폐지)
 - ※ 장애대학생 현황('16년1학기) : 기초~3구간 4,386명, 그 외 1,764명

□ 기대효과

- **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**에 대한 지원 강화로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의 건전한 계층이동 촉진을 위한 **교육희망사다리 복원**

□ 필요성

- 다자녀 가구의 대학교육비 지원이 저소득층 외 **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은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실효성이 미미**
- 저출산 대책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안 필요

□ 주요내용

- 셋째 이상만 지원하던 다자녀 장학금을 다자녀 가구 내 **대학생 자녀 모두에게 지원**, 지원연령 **상향(98.11→'88.11출생자)**
 - *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에 따른 청년 적용
- 소득 3구간 이하(70%↓)는 520만원, 소득 4~8구간(70%~200%)는 450만원 지원
 - ※ (사례) 세명이 모두 대학생인 기준 중위소득 120%(소득 6구간)이하 가정 ⇒ ('17년) 첫째,둘째 168만원, 셋째 450만원, ('18년) 세자녀 모두, 각 450만원 수혜

□ 기대효과

- 다자녀가정의 대학 학비 부담 경감 및 체감 가능한 저출산 정책 마련
- 대학학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

8 초과학기제 제한 폐지 및 소득 조사 횟수 단축

□ 필요성

- 매학기 신청·조사를 실시함에 따른 **대학생의 불편함 해소** 및 **편의성 제고**
- **복수전공·편입 확대 등 대학 재학 기간이 장기화**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국가장학금 지원기회 보장 필요
- 소득변경 요청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있어 소득구간 산정의 신뢰도 하락

□ 주요내용

<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 보장 ⇒ 초과학기제 제한 폐지 >

- 국가장학금 지원기간을 총 등록학기 범위와 총 지원 횟수로 이중제한하고 있었으나,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만 적용·지원
 - *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 : 2년제(4회), 3년제(6회), 4년제(8회), 5년제(10회), 6년제(12회)
- ※ 예시) 4년 동안 국가장학금을 6회 받은 4년제 재학생이 복수전공으로 수학 기간이 연장된 경우 '17년 까지는 추가 지원 안 됨, '18년부터 총 8회까지 보장

< 소득구간 연 1회 조사, 원하는 경우에 재신청·재조사 가능 >

- 2학기에는 1학기 대비 소득·재산, 가구원 및 학적 등이 변동 없을 경우, '계속 사용하기' 버튼 활용 신청(변동 생긴 경우만 재신청)
- ※ 1년 단위 신청사례 : 초·중·고 교육급여 사업(매년 3월, 1회), 생계급여(보건복지부) 등

< 이의신청 절차 합리화 >

- 추가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소득현행화, 순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관리

□ 기대효과

-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정규학기 내 졸업할 수 없는 **대학생 수혜기회 보장**
- 1년 단위 소득구간 고정으로 안정적 학비 조달 예측 가능성 제고
- 학기마다 신청하는 학생의 부담 경감 및 신청 누락 방지

9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

□ 필요성

- 수혜자 현실 여건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일부 개선 필요

□ 주요내용

< 학생 소득평가액 공제 확대 >

- 대학생 본인의 교육비·주거비·생활비 등의 지출비용을 고려하여 소득평가액 공제 확대*(기존 70만원→100만원)
- * 대학생 월평균 지출액 102.2만원 적용(금융위 실태조사 발표, '17.11월, 2018 경제정책방향' 17.12월)

< 그 외 제도개선 >

- **(공공기관 대출금 부채 인정)** 공무원연금공단, 군인연금, 사학연금공단, 교직원공제회 등의 대출금 잔액을 부채로 인정(증명서 제출 필요)
- **(중복소득 개선)** 보건복지부(사회보장정보원)와 협업하여 건보 '근로소득'과 국세청 '사업소득' 중복 문제 개선

□ 기대효과

- 소득 산정기준 현실화 및 미연계 정보 반영 개선으로 소득 산정 오류 최소화

10 오선발 방지 대책 강화

□ 필요성

- 대학의 오선발, 중복지원 등으로 반환금이 발생하는 등 장학금이 적기 적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 개선 필요

□ 주요내용

- **(사전방지)** 국가장학금 오선발 최소화를 위한 점검 시스템(Tool) 개발, 대학별 교직원 연수 강화, 오선발 반복대학 방문 컨설팅 시행
- **(사후점검)** 중복지급 등 업무 불성실교에 대한 불이익 강화
- * 대학의 착오입력 등으로 발생하는 장학금 반환 등에 대한 학생 구제 및 대책무성 강화책 검토 예정

□ 기대효과

- 오선발 방지로 장학금 재원 배분의 효율성·공정성 강화